

삶의 질 위협하는 환경문제 강력 대처

전북도, 조속한 해결 위해 환경부 등과 제도개선 추진

전북도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사안에 대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시군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환경부, 타 시도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입실에 반입된 오염 토양과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을 처리 업체에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북도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반입된 토양 시료를 채취

한 뒤 성분 분석을 해 허가받은 성분 이외의 중금속 등이 검출되면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이 업체에 해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오염 토양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가 현행 토양정화업 관련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정치권과 협조해 법 개정

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군산의 불법 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보내온 것으로,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폐기물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 불법 폐기물은 반출 조치하고, 도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폐기물은 이날부터 타 지역의 민간 처리업체로 전량을 실어 내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과 함께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희망경제 '마을기업'

도, 신규 3개소 · 고도화 2개소 지정... 일자리와 소득창출 기대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2019년도 신규 마을기업 3개소와 2018년 마을기업이었던 2개소가 2019년 고도화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번 마을기업 선정 심사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 중 1차 시군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도 심사를 거쳐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 했다.

당초 전북도에서는 7개소(신규 마을기업 3개, 고도화마을기업 4개)를 추천했으나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2개소가 지정 제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심사 채택률이 전국적인 심사 평균채택률 57%보다 24%이상 높은 71.4%를 기록했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신규 마을기업은 성암산들(정수군), 구름계(정수군), 모두의 숲(순창군)이며, 고도화 마을기업은 농업회사법인콩사랑(정읍시), 씨씩한콩나물영농조합법인(정

읍시)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가공제품을 만들고 중간지원기관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밀컨설팅 · 맞춤형 교육 · 각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사업비로 2019년 신규 마을기업에 5천만원, 2018년 고도화마을에 2천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 마을기업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앞으로는 기존 지정마을기업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마을기업에 새로운 사업개발 및 판로 개척 등 자체적인 사업 역량을 강화하며, 신규 마을기업 지정 방향을 도시형, 청년형 마을기업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소방,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태세 돌입

주요 행사장 소방차 현장배치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운)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지역별로 개최하는 달집태우기 등 주요 행사장에 화재예방 감시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9시까지 도내 전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월 대보름맞이 지역행사가 40개소에서 1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놓는 행사를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특히 화재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

40대 소방인력 270여명을 주요 행사장에 배치하여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재운 소방본부장은 "정월대보름 행사 관계자께서는 행사 진행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라며, 불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화재예방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좌우측에 더불어민주당 총영표 원내대표, 조장식 정책위의장.

'권력기관 개혁' 다시 드라이브 건 文... 연내 마무리 주력

법제화의 제도화 통해 '사법개혁 원수' 의지 다시금 내비치

올해를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화의 제도화'를 통해 사법 개혁 원수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국회에 연내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이와 별개로 정부가 실현할 과제들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 국정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머쥔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을 도맡고 있는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은 올 초 목표로 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총 출동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 10일 신년기 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올해 국정방향의 목표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해왔다.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 개혁의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문 대통령은 "각 (개혁)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과거 정부에서 매번 이슈로 제기됐으나 내부 저항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는 사례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입법화를 통해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히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도의 온전한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막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오는 6월까지 활동 시한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문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입법과 과정을 완수해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입법 과정만

가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입법과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별개로 행정부 차원에서 적폐 청산 등을 포함한 차질 없는 개혁과제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물밑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 부분 이관될 경우 힘이 비대해진다 우려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권한 분산을 통해, 경찰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비대한 힘을 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날 당정청이 14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안을 발표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안 역시, '무늬만 자치 경찰'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상상되는 사법개혁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로드맵에 있어서 1호 과제인 권력형 적폐 청산 과제가 완수되지 않으면서 사법개혁이 지지부진 해지자 다시금 의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인 것이다. /뉴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ijmaeil.com에서

